

이 보도자료는 2015. 12. 8.(화)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서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홍락

전화 (02)706-1692

**보도자료**  
2015. 12. 4.(금)

자료문의 : 형사제5부장실  
전화번호 : (02)706-1695  
팩스번호 : (02)3270-4297  
주책임자 : 형사5부장 손준성

### 제 목

## 환경 분야 국가 R&D 보조금 편취 사건 수사 결과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(부장검사 손준성)은 2015년 10월부터 2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여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분야 국가 R&D 보조금을 가장거래 등의 방법으로 횡령·편취한 6개 업체 대표 등 총 7명을 기소(2명 구속, 5명 불구속)하였음
- 수사를 통해 환경 분야 업체들이 ①통장·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②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, ③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과제로 신청, ④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 정산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유용·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  - 4대강 녹조측정장치 개발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60%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, 타 업체로부터 빌린 기자재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제품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은 사례 등도 확인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들을 엄정하게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환경 분야 보조금 관련 범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임

# 1 수사 착수 배경 및 수사결과

## 1. 수사 착수 배경

-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15. 9. 대검찰청의 “국가재정 관련 및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사범 단속 지시”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R&D 보조금 편취 사범 수사에 착수
-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1개 업체에 대한 환경 분야 보조금 편취 사건 수사 중 동종 비리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확대
- 우리청 관내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은평구 소재)과 협업하여 환경부 주관 R&D 보조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분석 후 일부 업체의 국가 보조금 유용 및 편취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국가 R&D 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準정부기관으로서 관리하는 보조금 규모가 **2010년 1,264억 원**에서 **2015년 2,054억 원**으로 매년 증가 추세

## 2. 수사 결과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분야 국가 R&D 보조금을 유용·편취한 6개 업체 대표 등 총 7명을 기소(2명 구속, 5명 불구속)
  - 실질적으로 부정 이익을 취득한 업체 대표 위주로 형사처벌하고, 속칭 ‘乙’의 입장에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‘甲’의 위치에 있는 업체의 요구를 들어 거절하기 어려운 단순 가담자로서 부당한 이익이 없는 업체들은 불입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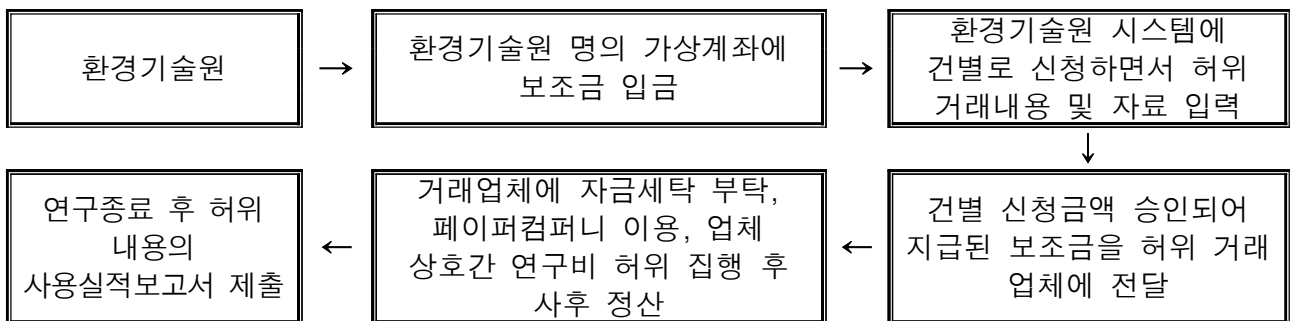
**<업체별 범죄사실 요약>**

순번	피고인 (연구기관)	공범인 상대 허위 거래업체	범죄사실	횡령 또는 편취액 (단위 : 원)	처분 내용
1	A (52세, 가 업체)	나, 바 업체 및 그 외 6개 업체	‘11. 10.~’15. 1.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국가 R&D 보조금을 받아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횡령· 편취	722,329,030	A 구속기소(‘15. 12. 1.)
			‘12. 2.~’14. 5. 다수의 통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위·변조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		
			‘12. 7.~’14. 9. ‘나’ 업체의 산업 기술평가관리원의 국가 R&D 보조금 편취에 가담	101,462,000	
2	B (48세, 나 업체)	가 업체 및 그 외 2개 업체	‘11. 5.~’13. 12. ‘가’ 업체의 환경 분야 R&D 보조금 횡령·편취에 가담	226,022,500	B 구속기소(‘15. 11. 16)
			‘11. 7.~’14. 9. 산업기술평가관리 원의 국가 R&D 보조금 편취	229,848,500	
3	C (60세, 다 업체)	9개 업체	‘11. 10.~’15. 9. 위 환경 분야 R&D 보조금을 받아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횡령·편취	776,189,700	C, D 불구속기소(‘15. 12. 4.)
4	D (56세, 다 업체)				
5	E (51세 라 업체)	3개 업체	‘13. 8.~’15. 7. 위 환경 분야 R&D 보조금을 받아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편취	1,149,370,000	E 불구속기소(‘15. 12. 3.)
6	F (44세, 마 업체)	6개 업체	‘11. 12.~’15. 9. 위 환경 분야 R&D 보조금을 받아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횡령·편취	357,106,000	F 불구속기소(‘15. 12. 3.)
7	G (48세, 바 업체)	가 업체	‘12. 11. ‘가’ 업체의 환경 보조금 횡령에 가담	37,600,000	G 불구속기소(‘15. 12. 1.)

## 2 기본 범행구조 및 주요 범죄 유형

### 1. 기본 범행구조

- 종래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'환경기술원'이라고 약칭)은 보조금을 총액으로 연구기관 선정 업체에 일괄 지급, 위 업체들은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정산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횡령
- 이후, 환경기술원에서 보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'12년 말경 건별 지급방식(건별 연구비 신청, 심사 후 건별 지급)으로 전환하자, 거래 업체에 자금세탁 요구, 페이퍼컴퍼니 이용,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 집행 후 사후 정산 등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편취



### 2. 주요 범죄유형

[유형(1) 위조 통장거래내역,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용실적 제출(순번1 업체)]

- 보조금을 연구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후, 사용실적보고 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증빙서류로 제출

※ 통장 속지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위조하여 일치시키는 수법으로 환경기술원 기망

[유형(2)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(순번3~5 업체)]

-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아 거래 가장하고,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거래업체와 하도급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, 환경기술원→피의자→거래업체→페이퍼컴퍼니→피의자 順으로 자금 반환

[유형(3)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받아 보조금 편취(순번6 업체)]

- 이미 개발된 기술임에도 마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환경기술원에 사업계획서 제출,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보조금 편취

[유형(4) 상호간 연구비 허위 집행 후 사후 정산(순번1, 2, 6 업체)]

- 대학 동문·제자·회사 직원 등 관계자들이 설립한 업체들이 환경기술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, 각자 연구비를 허위 집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타 업체에 송금토록 하거나 상호간 보조금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는 보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

### 3

## 동종 범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1. 개별 연구비 신청 시 환경기술원에서 거래 상대업체에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

- 개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보조금이 연구기관 선정 업체에 지급된 후 거래처로 집행되는 방식은 유지되고 있어, 선정 업체가 보조금 임의 사용하거나 주도적으로 허위 거래 외관을 작출할 가능성 상존

▶ 환경기술원 계좌에서 거래 상대업체 계좌로 직접 집행할 경우,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통제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

2. 국가 보조금 지급 시 연구 관련 거래업체 등록 의무화

- 현재는 연구비가 실제 집행되는 거래 상대업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, 페이퍼컴퍼니나 관계회사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▶ 현재 3,000만원 이상의 개별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에 거래 상대업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, 연구기관 선정 시 거래 상대업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의 진정성, 이상거래 유무 수시 점검 필요

### 3. 효율적인 실사시스템 마련

- 연구 적정 여부를 관리하는 전문위원이 1인당 1년에 연구과제 수십 개를 관장하고, 환경기술원에서는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된 정산 서류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 없이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
- ※ 현장실사 일정에 맞춰 타 업체로부터 기자재를 빌려 비치해두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제품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실사를 받은 사례 등 확인(순번6,7 업체)

▶ **전문위원 풀(Pool)의 확대,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시작품·시험설비에 제조 고유번호 부착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실사시스템 마련 필요**

## 4 본건 수사의 의의

- 환경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환경부 주관의 국가 R&D 보조금을 유용·편취한 업체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탈행위에 경각심 고취
-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가 보조금의 60% 상당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(순번1 업체)를 확인하여 해당 결과물의 재평가를 요청하는 등 국가 보조금 책정 규모 또는 연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 환기
- 수사 과정에서 환경기술원과 유기적으로 공조한 것에 이어, 『클린 피드백』의 일환으로 수사 결과 도출한 동종 범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법무부·대검을 통해 환경부·환경기술원과 협의할 예정
-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환경 분야 국가 R&D 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수사 필요성 확인